

돈콜레라 살처분 보상금 폐지와 양돈인의 목소리

'83년부터 시행돼 국내 양돈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어왔던 돈콜레라 살처분 보상금제도가 8월 1일부터 사실상 폐지돼, 앞으로 양돈농가들은 돈콜레라가 감염된다 해도 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살처분 매물을 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 「살처분 등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해 '83년부터 시행해 온 돈콜레라를 살처분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그 후 양돈업계의 커다란 반발과 양돈협회의 강력한 건의로 30두 미만 양돈농가에 한해 돈콜레라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키로 다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대해 많은 양돈농가들은 「요즈음 그렇지 않아도 양돈불황과 축산물 수입개방, 양돈폐수단 속, 무허가 축사문제로 2~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터에 돈콜레라마저 살처분 보상금을 제외시킨다니 어안이 병병할 따름」이라며 말문을 잊지 못했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돈콜레라 살처분 보상금 제외 조치는 양돈농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양돈농가들이 더욱 놀라와 한 사실은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양돈농가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폐지했다」고 밝힌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양돈농가들은 이 제도의 폐지를 찬성한 당사자들을 성토하는 한편, 「앞으

로 양돈인들을 배신하는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분개해 했다. 특히 어떤 양돈농가는 「이 제도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양돈인의 입으로 폐지를 주장할 수 있느냐」며 「차제에 그와같은 양돈인이 양돈업계에 발불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돈콜레라 살처분제도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어떤 과정을 거쳐 폐지되었는지, 또한 이 제도의 폐지로 양돈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돈콜레라 살처분 보상금제도 채택 경위

돈콜레라 살처분 보상금지급제도는 1983년에 처음 채택되었다. 당시 전국에 돈콜레라가 집단 발생(돈콜레라 파동)해 많은 양돈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특히 백신을 접종한 양돈장에서도 돈콜레라가 발생해 피해가 컸다. 백신을 접종한 돼지에서도 돈콜레라가 발생하자 당시 「뜨물백신」이라고 말이 생겨났고, 이 사건으로 가축위생연구소 연구관 등 고위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사직하고 말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돈농가들은 자신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돼지가 돈콜레라로 죽어 나가도



피해 보상 한푼 받지 못하고 통곡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돈콜레라를 살처분 보상금지급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수차례 걸쳐 강력히 요청했고, 급기야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말 그대로 이 제도는 양돈농가들의 커다란 피해속에 채택되어 지금까지 양돈농가들의 돈콜레라 조기발견과 조기방역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었다. 당시 50%였던 살처분 보상금도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80%로 상향조정되어 폐지시까지 지급돼 돈콜레라 퇴치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이 제도는 어려운 가운데 채택돼 돈콜레라 조기방역에 기여해 온 것이다.

● 정부의 돈콜레라 살처분 보상금 폐지 명분

정부는 돈콜레라가 적기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우며, 돈콜레라 살처분 보상금을 오제스키병 등 긴급하고 자율방역이 곤란한 외래성 질병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결정은 어디까지나 양돈농가들이 폐지를 찬성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돈콜레라 살처분 보상금 폐지 경위

지난 7월 11일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에서 가축질병방역대책위원회 개최를 위해 양돈협회에 양돈회관 회의실 사용을 요청해 왔다. 그날 가축위생과장 주재로 동 위원회의가 열려 오제스키

진단키트 개방문제와 함께 돈콜레라 살처분 보상금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양돈업계의 영세성과 현실여건을 들어 폐지를 반대했다. 그러나 일부 지각없는 양돈인과 공직에 있는 인사가 돈콜레라는 백신만 철저히 하면 예방할 수 있으나 소규모 양돈장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축주의 책임도 크다고 밝히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양돈협회에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림수산부는 그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더 검토키로 한후 회의를 끝냈다.

그후 7월 30일 안양가축위생연구소에서 열린 가축질병예찰협의회에서 돈콜레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할 것인가를 논의하던중 농림수산부 당국자가 8월 1일을 기해 돈콜레라 살처분 보상금을 없앤다는 발표를 했다. 그날 회의에는 양돈협회에서 전동용 회장과 노영한 전무이사가 참석을 했는데, 정부관계자의 얘기를 듣고 전동용 회장이 책상을 치며 강경한 어조로 「돈콜레라 보상금제도를 어떻게 만든 것인데 새로 부임한 사람들이 경위도 알지 못하고 없애느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대해 농림수산부 관계관들은 정부가 이 제도를 없앤 것은 양돈을 하시는 양돈농가들이 폐지를 찬성해서 없앤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 특히 농촌진흥청 축산지도과장은 자신도 공무원이지만 보상금폐지를 반대했는데, 지난 회의에서 양돈농가가 찬성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발언까지

하였다.

또한 축산국장도 그후 양돈협회 양돈산업현안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살처분 보상금은 양돈농가들이 찬성해 폐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돈농가들이 찬성했다는 말은 양돈협회의 임원, 방역대책위원장, 지부장 등 공직을 맡은 공인이 찬성하였기 때문에 양돈인의 대표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살처분 보상금 일부 재지급 결정

양돈협회에서는 정부의 돈콜레라 살처분 보상금 지급 폐지 발표 즉시, 이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농림수산부에 제출하는 한편, 축산국장 등 관계관을 만나 보상금의 필요성과 양돈업계의 현실을 수차 설명하여 우선 30두 미만 양돈농가에 한해서이지만 보상금을 다시 지급하도록 했다.

● 돈콜레라 살처분 보상금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

돈콜레라는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돼지 질병이고, 계속 발생이 늘고 있는 질병이다. 또 돈콜레라는 백신접종을 했다 해도 100% 예방이 안되고 발병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질병이다. 최근 백신이 많이 좋아졌지만 만성형이나 백신접종 프로그램의 미숙이나 백신의 보관상태 등 확인하기 어려운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백신을 분명히 접종한 농장에서도 발병하는 사례가 있다.

그밖에 돈콜레라는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발병할 경우 보상금 없이 당국의 살처분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양돈농가들이 신고를 기피할 것이 틀림없고, 이럴 경우 병을 숨기게 돼 조기발견에 의한 조기방역을 할 수 없어 이 질병이 전국으로 전파될 염려가 크다.

또한 대규모 농장들은 관리 수의사 등이 있어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100두 이하를 사육하는 영세양돈농가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 폐지로 결국 피해를 보는 계층은 중소규모 양돈농가가 된다.

● 향후 대책

이상 돈콜레라의 살처분 보상금제도 시행 과정과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양돈업계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적자양돈을 지속하는 가운데 축산물 수입은 자꾸 개방되고 폐수문제로 양돈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같이 어려운때 양돈농가들에게 원가절감이 되는 관세·부가세의 폐지는 같이 외치지 못할 망정, 전양돈인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의견을 공공연히 표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돈농가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배신행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현재 양돈업계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다. 수입곡물에 대한 관세 면제와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위해 전양돈인들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 또다시 중간에서 양돈인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개인의사라는 미명하에 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모든 양돈인들도 양돈업계의 이익과 관계되는 사항은 신중을 기해 대처해야 하며,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할 것이다. 특히 공인의 경우에는 더욱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도 폐지기로 한 돈콜레라 살처분 보상금을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해 다시 지급하는 가운데, 돈콜레라를 퇴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